

건설동향브리핑

제440호 (2013. 12. 9)

■ 경제 동향

- 11월 CBSI 전월비 1.4p 하락한 60.9 기록

■ 정책 · 경영

- 4.1 및 8.28 대책 후속 조치, 세부 조정 통해 실효성 제고 기대
- ODA 언타이드 확대 동향 및 대응 방안

■ 정보 마당

- 주요 선진국의 건설 통계 분석(I)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소방 시설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해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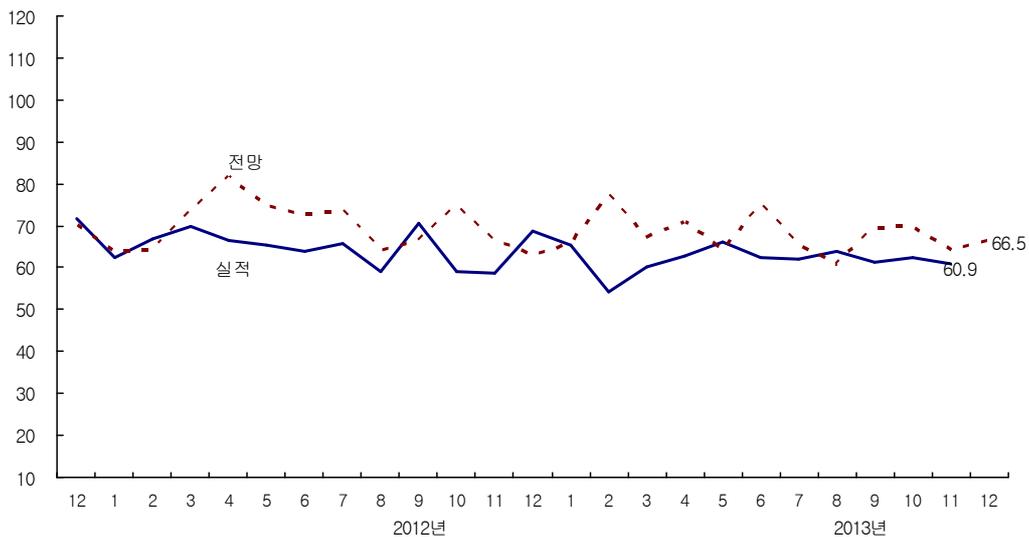
11월 CBSI 전월비 1.4p 하락한 60.9 기록

- 3월 이후 8개월 내 최저치 기록, 건설·부동산 대책 입법화 시급 -

■ 1개월 만에 다시 하락, 60선에서 부진 거듭

- 2013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비 1.4p 하락한 60.9를 기록함.
 - 이로써 전월인 10월에 소폭(1.1p) 상승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으며, 3월(60.3) 이후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11월에 기록한 60.9는 올 들어 2월(54.3)과 3월(60.3)을 제외한 연내 가장 낮은 수치로,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 침체가 그만큼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 이는 11월 들어 건설 경기를 개선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건설기업 체감 경기의 침체 수준이 추가적으로 악화된 결과로 판단됨.
 - 올 들어 1월(65.4)과 5월(66.1)에 60선 중반을 소폭 상회한 것을 제외하면 60선 초반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 전월비 상승, 중소기업 지수 큰 폭 하락

-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상승했으나, 중소기업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11월에는 그동안의 지수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전월비 소폭(1.1p) 상승한 85.7을 기록함.
 -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1.9p씩 상승한 중견업체 지수는 11월에도 전월비 8.8p 상승해 60.7을 기록했는데, 지수 자체는 아직 60선에 불과해 체감 경기의 수준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6.1p 하락한 32.0을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체감 경기의 침체 수준이 매우 악화됨.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5.4	54.3	60.3	62.8	66.1	62.4	62.1	64.0	61.2	62.3	60.9	64.1	66.5	
구 모 별	대형	85.7	72.7	69.2	71.4	78.6	78.6	85.7	92.9	85.7	84.6	85.7	76.9	85.7
	중견	66.7	48.0	66.7	66.7	66.7	64.3	50.0	48.1	50.0	51.9	60.7	61.5	66.7
	중소	40.0	40.0	42.6	48.1	50.9	41.2	48.1	48.1	45.3	48.1	32.0	51.9	43.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2월 전망치, 11월 실적치 대비 5.6p 상승한 66.5 기록

- 2013년 12월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5.6p 상승한 66.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5.6p 상승한 것은 12월에는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에도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4.1 및 8.28 대책 후속 조치, 세부 조정 통해 실효성 제고 기대

- 공유형 모기지 · 희망임대주택리츠 확대, 목돈 안 드는 전세 I 은 은행 자율 운영 계획 -

■ 정책 모기지 통합, 효율성 증대로 지원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기대

- 정부는 지난 12월 3일, 금융 정책의 세부 조정을 중심으로 4.1 및 8.28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함.
-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임.
 - 소득 제한이 있는 정책 지원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 형태가 있음.
 -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모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이 상이하여 수혜의 형평성 논란 및 선택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재정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주택기금 채원, 은행 이차 보전, 주택금융공사 이차 보전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성 제고 논란도 존재함.
 -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와 통합 정책 모기지로 단순화하여 1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됨.

■ 실효성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 희망임대주택리츠, 목돈 안 드는 전세Ⅱ에 집중

- 수익 ·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2조원(1만 5,000호) 범위 내에서 12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계획임.
 -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일정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에도 공급 대상의 조건 및 금리 등은 시범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할 예정임.
 -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아파트로 한정
-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천호 정도 매입할 예정이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추가 매입할 계획임.
 - 희망임대주택리츠는 1차 매입(508호)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500호)은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매입 신청 접수(810호)를 마감한 상황임.

- 올해 매입 대상은 85㎡,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 내년부터는 면적 제한 폐지 예정
-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 보증과 연계한 모델인 목돈 안 드는 전세Ⅱ는 사업을 지속하되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은행의 자출에 맡길 예정임.
 -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지원 실적이 2건에 불과하여 앞으로는 은행이 자출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할 예정임.
 - 목돈 안 드는 전세Ⅱ는 전세 대출과 전세금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함.
 - ※ 대한주택보증과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은행이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채권 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 대출을 취급할 계획임.

■ 행복주택, 물량 줄이되 젊은 사회 활동 계층 지원 및 사업 방식 다양화

- 행복주택의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젊은 사회 활동 계층의 입주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당초 계획보다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행복주택의 공급이 국민임대주택 등의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당초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물량을 축소함.
 -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 비율을 당초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 기존의 철도 부지, 공영 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용지뿐 아니라 도시 주거지 재생 및 산업단지의 주거지 개선과 연계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세부 조정 통해 실효성 제고 기대, 단기 지원책 중심의 한계성도 존재

- 4.1 및 8.28 대책의 주요 정책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세부 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시킴.
 -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세부 조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일정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주요 정책이 제한적·한시적 지원책으로 단기적인 시장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공유형 모기지 지원은 1만 5,000호, 희망임대주택리츠는 1,000호 수준으로, 시장 규모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시장 반전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음.
 - ※ 2012년의 연간 매매 거래량은 100만 호, 연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6만 호 수준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cerik.re.kr)

ODA 언타이드 확대 동향 및 대응 방안

- PPP 사업 투자, 기술 협력과 유상 지원 연계 등 적극적 대응책 모색 필요 -

■ ODA 언타이드 확대, 해외건설 수주 기회의 축소 방향으로 작용 가능성 커

- 2010년 1월에 정식으로 DAC(개발원조위원회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DAC의 권고에 따라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언타이드(Untied,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는 로드맵 수립
 - ODA의 언타이드화 범위가 확대될 경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선진국 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이, 시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기업이나 현지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

■ 정부, 2015년까지 ODA의 75%까지 언타이드화 추진 계획

- 2015년까지 유상 원조의 50%, 무상 원조의 100%까지 언타이드 확대 추진 예정
 - 유상 원조인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최빈국 및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협조 용자 전체로 25%까지 확대하였으며, 2015년에는 비교 우위 및 타이드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50%까지¹⁾ 확대하고자 함.
 - 무상 원조는 MDGs(새천년 개발 목표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²⁾ 달성 목표 연도(2015년)를 고려하여 언타이드화 목표율을 2015년 100%로 설정함.

■ 2011년 말 현재, 전체 양자 간 원조 중 언타이드 비율은 이미 51.1%³⁾

- 2000~06년도까지 전체 양자 간 원조 중 언타이드의 비중은 2% 내외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무상 원조 중 언타이드의 비중이 68.4%에 달하고 있으며, 유상 원조 중 언타이드의 비중은 46.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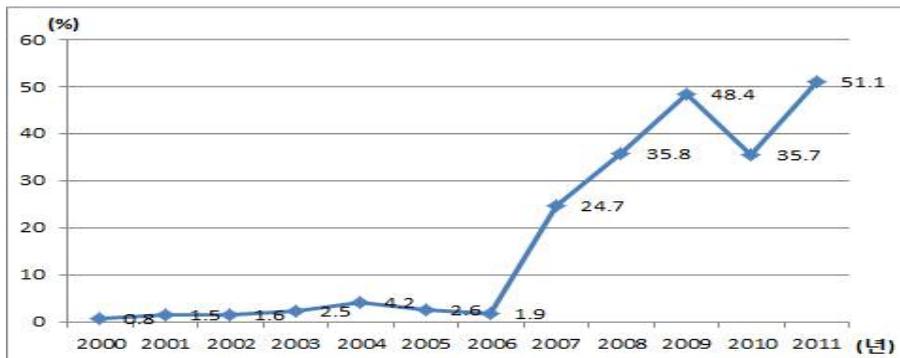
1) 2005년 기준 DAC 회원국 총 원조액 중 언타이드로 보고된 비율은 약 86.5%임.

2) 2001년 6월 UN은 2000년 9월 채택된 밀레니엄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목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발표함. 이는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남녀 평등 및 여성 권익 향상, 아동 사망률 감소, 모자 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됨.

3) 전체 양자 간 원조 중 기술 협력 및 행정 비용 제외

- 언타이드화의 확대 정책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유상 원조인 EDCF이므로 해외건설 중 특히, 시공 분야에 미치는 상대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ODA 양자 간 원조 중 언타이드화 비중 추이(약정 기준)>



주 : 2011년 비율은 한국수출입은행 내부 자료이며, 2012년 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1), 「우리나라 ODA 현황」, 27~28쪽.

■ 정부 대응책 방어적 측면 강화...수주 감소 효과 최소화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정부의 주요 대책인 기술 협력의 경우, 우호적인 입찰 환경 조성에 기여하나, 수원국 기업에 의한 기술의 복제·유출로 현지 경쟁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부작용 내재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인 수준(Nut Cracker)임. 또한, 기술 협력으로 수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민간과 연계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 지원의 연계 강화(패키지화),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 민간 기업이 대규모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 ODA 자금의 출자금 대출, 차관을 통한 PPP 사업의 일부 수행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PPP 사업을 위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에 ODA 자금으로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 요망
 - ※ 수출입은행에 문의한 결과,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분 투자도 가능하다고 함.
 - 무상 지원인 기술 협력을 통해 수주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된 사업의 경우 EDCF를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연계, 지원하여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 무상 지원을 통해 주요 수원국들에 우리나라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코드, 기준(Standard) 등과 같은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을 확산시켜 근본적인 수주 환경 개선 필요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주요 선진국의 건설 통계 분석(I)¹⁾

-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의 2012년도 건설업 통계 비교 -

■ 건설 매출 규모

- 2012년도 국가별 건설 매출 규모는 미국 6,650억 유로, 일본 4,210억 유로, EU(유럽연합) 27개국 1조 1,720억 유로로 나타남. 2011년에 비하여 미국은 17% 증가한 반면, 일본과 EU는 각각 36%, 3% 감소하였음.
- EU 27개국 중 독일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610억 유로를, 프랑스는 0.5% 증가한 1,700억 유로의 건설 매출을 기록. 반면, 영국은 1,290억 유로로 전년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EU 27개 국가 중 건설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국가는 7개국이며, 감소한 국가는 9개국, 전년과 동일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나타남. 국가별 매출액과 순위, 변화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EU 27개국의 총 건설 매출액은 2012년 EU 27개국 GDP의 9.1% 수준이며, 총 고정자본 형성의 49.9%임.

<국가별 건설 매출>

(단위 : 십억 유로)

국가		미국	일본	EU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건설 매출	2011년	568	653	1,208	45	38	41
	2012년	665	421	1,172	52	55	46



<EU 27개 국가별 건설 매출>

(단위 : 십억 유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체코
		256	169	136	142	137	57	46	47	38	29	30	26	19
		261	170	131	129	115	52	50	47	39	33	30	26	17
포르투갈	그리스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몰타	
	16	10	9	9	6	6	5	4	2	2	2	3	2	0.5
14	13	9	7	6	6	5	4	2.6	2	2	2	1	0.5	

주 : 위 칸의 건설 매출액은 2011년도 통계치이며, 아래 칸의 건설 매출액은 2012년도 통계치임.

자료 :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FIEC, Federation de l'Industrie Europeenne de la Construction).

1) 본고는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FIEC, 1905년 창립)가 미국, 일본, EU 27개국, 그리고 FIEC 회원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의 건설산업 활동을 조사하여 발표한 주요 건설 지표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임. I편에서는 건설 매출과 건설 고용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II편에서는 EU 27개국과 FIEC 회원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의 건설업체 수, 공종별 비중, 해외공사 실적을 분석 게재할 예정임.

■ 건설 고용 규모

- 2012년 건설 고용의 경우, 미국 564만 1,000명, 일본 503만 명, 그리고 EU 27개국 1,461만 4,000명을 기록하였음. 이는 2011년에 비하여 미국 2.4%, 일본 6.3%, EU 0.1% 증가한 것으로, 일본과 EU는 총 건설 매출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EU 27개국 중에서는 독일 245만 6,000명, 영국 199만 7,000명, 프랑스 186만 9,000명, 이탈리아 175만 4,00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전년 대비 각각 1.1%, 6.6% 증가한 반면 영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8.4%, 5.0% 감소하였음. 독일이 건설 매출의 규모와 고용 규모에서 2년 연속 1위로 조사됨.
- EU 27개국 중 건설 고용 규모가 증가한 나라는 9개국, 감소한 나라는 14개국, 전년과 동일한 나라는 4개국으로, 국가별 고용 규모와 변화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EU 27개국의 2012년도 총 건설 고용 규모는 유럽 전체 총고용 인구의 6.8% 수준으로, 이는 유럽 전체 산업 분야 고용의 30.2%이며, 건설 고용 규모가 2011년에 이어 여전히 산업별 고용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국가별 고용 규모>

(단위 : 천 명)

국가		미국	일본	EU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건설 고용	2011년	5,504	4,730	14,599	301	1,676	191
	2012년	5,641	5,030	14,614	337	1,811	199



<EU 27개 국가별 고용 규모>

(단위 : 천 명)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체코
	2,428	1,753	1,847	2,181	1,393	441	312	875	280	261	188	146	447
	2,456	1,869	1,754	1,997	1,148	467	312	1,272	280	266	188	143	425
포르투갈	그리스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몰타
	440	242	339	108	203	245	140	37	37	94	46	67	11
	357	206	378	103	173	264	241	37	42	33	89	44	60

주 : 위 칸의 건설 고용 규모는 2011년도 통계치이며, 아래 칸의 건설 고용 규모는 2012년도 통계치임.
 자료 : 유럽건설업국제연합회(FIEC)

김영덕(연구위원·정책 · kyoduk@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 2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공사비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추진 여부 심의
12. 4	NH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 도시재생포럼 제12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문 과정」 개설

- 교육 기간 및 장소 : 2013. 12. 10(화)~12(목),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대상 : 건설기업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및 유관기관 및 단체 관련 실무자
- 교육 내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재무 모델 실습 등
- 문의 및 참조 : 기업지원팀(전화 : 02-3441-0691, 0848), 홈페이지(www.cerik.re.kr)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초에서 정부는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를 비롯한 건설 관련 예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이처럼 건설 관련 예산을 감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의 일본과 비슷하여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990년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보다 30% 이상 증가한 30조~35조엔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1999년부터 10년 간 감소해 2008년에는 15조엔을 기록,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가 건설 관련 예산을 조정해 공공 건설투자를 감소시킨 이유는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한 개혁과 재정 건전성 때문임. - 건설투자를 활용한 대대적인 건설 경기의 부양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적자 재정의 체질화, 국채 잔고 누적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경제의 진정한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01~06년 장기 집권한 고이즈미정권은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함. •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조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건설기업의 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가 10년 이상 하락해 경제의 저성장 기초를 더욱 심화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1999년부터 실질 GDP 성장을 0.4%p 감소시킴. 2000년 이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경제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낮춘 것으로 분석됨. - 2000~01년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1만 2,368개의 건설기업이 부도를 맞았으며, 공공 건설투자의 하락은 중소 건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함. 1999년 60만 개였던 건설기업 수는 2011년 48만 개사로 감소하여 총 12만 개, 매년 1만여 개의 건설기업이 사라짐.

소방 시설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해법

건축물에서 소방설비는 중요한 재해방지장치이다. 그런데 최근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사를 배제하고, 소방설비 설치 작업을 별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동 건은 지난 16대 국회를 비롯하여 과거에도 수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실효성 문제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주된 이유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책임자가 실종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소방설비는 재해나 안전 측면에서 하자 책임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소방설비업체 중 10년 이상 존속하는 업체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즉, 분리 발주시에는 영세한 소방설비업체가 부도 처리되거나 폐업한 경우, 하자 책임자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통합 발주를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에 대해 안정적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것과 대비된다. 또,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제연설비 등의 설계 및 시공은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 건축물의 피난시설과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고, 배관·전기·통신시설 등과 연계가 미약할 경우, 화재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해가 확대된 경우 그 원인이 소방시설 때문인지, 건축공사 하자에 기인한 것이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즉, 소방 재해에 대한 일괄 책임자가 없다면 책임 소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소방공사의 분리 발주시에는 부적격 업체의 시공 참여가 늘어나면서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다. 그 이유는 공공공사 입찰 문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일례로 몇 년 전 전기공사의 분리 발주 입찰시 1건 공사에 무려 6천여 개사가 입찰한 적도 있다. 즉, 분리 발주는 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부실 업체의 시장 참여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소방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공사 관리나 하자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 기자재 조달까지 통합 발주하는 턴키나 디자인빌드, EPC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소방공사업체의 분리발주 주장은 결국 하도급 대금의 적정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그동안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심사, 대금지급보증, 필요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등 수많은 제도가 입안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면,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공사비 문제를 발주 제도로 해결하려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분리, 하자보수 책임자의 실종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국민생활의 안전 측면에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2013. 10. 31>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